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(대안)

심사보고서

2023. 10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원 안 : 2023. 9. 27. 이동호 의원 외 13명
- 위원회안 : 2023. 10. 13. 복지도시위원장

나. 상정의결

-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0. 13.)
“ 위원회안(대안) 가결 ”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주문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는 중증장애인의 사회·경제적 참여 활동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이행 및 촉진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촉구함
-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쟁선상에서는 열세일수 밖에 없으므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

나. 제안이유
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

우선구매 촉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, 또한 일반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.

- 그러나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,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시행,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.
- 특히, 2019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재정난이 가중되고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중증장애인의 사회적·경제적 터전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육성을 위해 보호 및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,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이행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함.

다. 이송처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, 구 산하 출자·출연 기관장

3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4. 토론 요지

- 결의 사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수의계약 방식 의무화 비율을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, 결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안(대안)을 상정·안건 처리함

5. 심사 결과: “위원회안(대안) 가결”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(대안)

관련의안번호
제276호

발의일자 : 2023. 10. 13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상정 의결 과정에서, 결의 사항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수의계약 방식 의무화 비율을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, 결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안(대안)을 제안함

2. 대안의 주요내용

- 결의 내용 중 수치를 삭제함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

우리나라는 1989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이후 2008년 8월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,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,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,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을 제정하였다.

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2021년 8월이 되어서야 장애인생산품을 포괄하여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를 제정하였다.

하지만 2022년 기준 강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1.24%로서,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구의 평균인 1.5%로 보다 현저히 낮은 구매실적이다. 조례로 100분의 1 이상의 권장을 규정한 것은 허울뿐이며, 조례를 제정한 후 우선구매 실적 또한 담보 상태이다.

현재 서울특별시에 139개, 강남구 관내에는 4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

매 생산품 생산 업체가 있다.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2019년 이후 지속되었던 코로나 펜데믹과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급격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,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다.

아울러,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법률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감사 또는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허울뿐인 목표치 달성 이후엔 물품 구매와 계약 시 경쟁입찰을 우선 시행하는 등 피부에 와닿을 만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저변 확대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.

장애인의 삶은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을 의미한다. 중증장애인들에게 ‘취업은 곧 복지’이며 ‘출근은 가족의 쉼’이 되는 등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그들의 일자리 확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책무이다.

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.

하나, 강남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라.

하나, 강남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방식을 적극 시행하라.

2023. 10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